

‘우렁찬 울음소리’ 특별시민 첫 등록 출생아 1338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인구통계 살펴보니

7월 주민등록 인구수 315만7777명…1329명 소폭 감소
보성·구례 큰 폭 증가·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운영 효과
북구-구례군, 17배 인구 편차…행정구역 개편 등 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후 첫 특별시 민으로 등록된 출생아 수가 1300여명에 달했다.
5일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등록 인 구수는 315만7777명을 기록했다.
이는 통합 전인 지난달(315만9106명) 에 비해 1329명 줄어든 규모다.

27개 시·구·군 가운데 전월에 비해 10 곳이 증가했고, 17곳은 감소했다.
특히 올해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 업을 실시하는 보성군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보성군은 전월에 비해 542명이 늘어 지 난달 3만8101명을 기록, 지난 2023년 7월 3만8003명 이후 3년만에 인구수가 3만 8000명대로 올라섰다.
이외에도 구례군(239명), 동구(144명), 신안군(68명), 함평군(50명), 장성군(35명), 고흥군(15명), 나주시(8명), 곡성군(6명), 광양시(4명) 등도 지역 인구수를 늘렸다.

반면 순천시 27개 시·구·군 중 가장 많은 398명이 감소하며 주민등록 인구수 27만3733명을 기록했다. 또 광산구(-365명), 여수시(-312명), 목포시(-294명), 남구(-219명), 영광군(-150명) 등은 100명 이상의 인구 감소폭을 기록했다.
새롭게 통합특별시민에 등록된 출생아 수는 1338명으로, 광산구(180명)와 북구(163명), 순천시(131명), 여수시(112명), 서구(102명) 등 6곳이 100명 이상을 기록했다. 농어촌 지역인 곡성군(5명)과 구례군(5명), 장흥군(8명), 함평군(9명), 신안군(9명) 등 5곳은 한자릿 수에 그쳤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남광주통합특별 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4.9%인 가 운데 고흥군은 전체 인구 5만8991명 가운 데 65세 이상이 2만8467명을 기록해 48.3%에 달해 27개 시·구·군 중 가장 높 았다.
청년층이라 할 수 있는 20세 이상 39세 이하 인구수는 66만3718명으로 전체 인구 의 21.0%를 기록했고, 광산구가 24.4% (38만2841명 중 9만7799명)로 청년층 비 율이 가장 높았다.
전남광주의 19세 이하 인구수는 47만 2666명으로 전체의 15.0%로 나타났고, 광산구가 7만1540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광주의 평균연령의 경우 47.6를 기 록했다. 고흥층 비율이 가장 높은 고흥군 은 59.6세에 달했고, 광산구는 42.1세로 27개 시·구·군 중 가장 평균연령이 가장 젊은 도시로 나타났다.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27개 시·구·군 의 심각한 인구 편차는 향후 행정구역 개 편 등을 고민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 구수가 가장 많은 북구(41만6780명)와 가장 적은 구례군(2만4576명)은 같은 기 초지방자치단체이지만 인구 편차는 39만 2204명으로, 북구 인구수가 구례군에 비 해 약 17배 많았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金 “목청 아닌 실력”·宋 “자기정치” vs 鄭 “탈당 이력”

민주 당대표 후보 2차 토론회
대표 리더십 등 놓고 대충돌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정청래·김민석 당 대표 후보(기 호순)는 5일 두 번째 TV 토론회에서 치열 한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 후보와 송 후보는 정 후보 에 화력을 집중했고, 정 후보는 두 후보의 탈당 이력을 꺼내며 반격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다음 총선에 승리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대표를 뽑자”며 “이것이 유일한 전당대회 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집권여당 대표가 무엇인가’ 라는 사회자 질문에 “목청의 크기가 아니 라 실력의 크기”라며 “국정을 든든하게 맡아서 대통령과 힘을 맞춰가는 것이 집 권 여당 대표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말 했다.

전임 대표였던 정 후보가 지난 1년간 이재명 대통령과 ‘옛박자’를 냈다는 주장 을 먼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는 다른 후보와의 비교 우위에 대해선 “선거운 국정인데 실수 없이 성과 를 내는 안정감”이라며 “그 과정에서 말 실수하거나 어떤 정책적, 정무적 실수를 하지 않는 안정감이 김민석의 가장 큰 비 고 수위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정 후보를 겨냥, “홍명보 리 더십이 아니라 히딩크 리더십으로 바뀌어 야 한다”며 “자기 정치만 하고 자기 조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김민석·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에서 열린 제2차 TV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을 만들기 위해 이 대통령과 어긋나는 정 치가 아니라 선당후사의 자세로 히딩크처 럼 이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집권 여당 대 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네거티브하지 않는다는 정 후보의 주장에 “네거티브하면서 네거티 브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뻔하게 하는 사람, 자기 정치에 몰두해 있는 사람이 아 니라 자기 지역구를 내주고 이재명을 지 키고, 싸워온 송영길이 이 대통령과 끝까 지 함께 갈 동지”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이 인제 조직을 이겼듯이, 정청래의 바람이 김민석의 조직을 이기게 해달라”며 “오직 민심, 오직 당심만 믿고 여기까지 왔다. 이 대통령은 제가 지킬 테니 당원들이 정 청래를 보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집권 여당의 대표는 배신이 아니라 의리라고 생각한다”며 “분열의 연 어가 아니라 통합의 언어, 동지의 언어라 고 생각한다. 2대1, 3대1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에 굴하지 않고 당내 통합

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는 10년 전 공천 탈락했고 탈 당하지 않았다”며 “두 후보는 탈당한 적 도 있다. 당 대표가 되려는 사람은 적어도 민주당 정체성, 정통성(기준)에서 탈당 한 이력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 몽준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탈당한 것 과 송 후보가 2023년 돈 봉투 살포 의혹으 로 탈당한 점을 꼬집는 것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민형배, 여수 ‘고용위기지역’ 지정 건의 노동부 현지실사서 석유화학 고용위기·지정 강조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지난 4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여수 시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여수시는 석유화학산업의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동 정세 등으로 어려움 이 가중되면서 현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지역 상권 위축 등 서민경제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달 23일 여수시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하고, 정 부 차원의 종합적 고용안정 대책 마련 을 건의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5일 ‘고용위기

역’ 지정 관련 현장 확인을 위한 고용 노동부 현지실사에 여수시, 유관기관 등과 공동 대응해 지역의 고용위기 상 황과 지정 필요성도 설명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업 급여 지급 기간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종합 취업지원 대책 수립, 일자 리사업 우선 지원 등이 가능해질 것으 로 기대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노동부 지원 등 을 통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 동안 2025년 53억 원, 2026년 142억 원 규모의 고용위기 대응사업 을 추진해 노동자 생계 안정과 기업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박성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장이 5일 시청 열린홀로부터 4개 항만공사 통합 추진과 관련해 ‘항만공사 독립 체제 유지 및 자율성 강화 촉구’ 담화문을 발표했다.

“항만공사 통합은 지역 균형 무너뜨릴 것”

박성현 광양시장, 담화문 발표
항만 경쟁력 하향 평준화 우려

박성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장 이 정부의 4개 항만공사 통합 움직임에 대해 지역 균형성장의 축을 무너뜨리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박성현 광양시장이 5일 시청 열린홀보 방에서 발표한 ‘항만공사 독립 체제 유지 및 자율성 강화 촉구’ 담화문에서 “글로벌 항만 간의 생존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전국 항만공사 통합’ 움직임은 글로벌 무 대에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쟁력을 떨어 뜨리고 지역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 각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동부권에 본사를 둔 ‘유일한 국가 공공기관’으로, 국가 경제의 혈맥이자 철강, 석유화학 등 지역 주력 산업의 생존이 걸린 핵심 인프라”라며 “광양항은 광양제철소와 여수국가산단을 뒷받침하며 원자재 수입과 제품 수출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지역경제와 산업의 근간이다”고 피력했다.
박 시장은 항만통합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혔다.
박 시장은 “4개 항만공사가 통합되면

항만 경쟁력이 약화되고 특정 우량항만으 로 ‘투자 쏠림’이 심화될 것이다”며 “당장 눈앞의 수익성이 높은 특정 대형 항만으 로만 투자가 집중되고 투자 기반을 고사 시켜 지자체 간의 소모적 갈등만 야기해 국가 전체의 항만 경쟁력을 하향 평준화 시킬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급변하는 해운 시장에 대한 대응력 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며, 본사 중심의 비 대해진 통합조직은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적기 대응하는 능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 이다”며 “현장 맞춤형 안전 체계 공백으 로 중대재해 위험이 가중될 것이다”고 강 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5극 3축’ 지역균 형성장 기조에 부합하는 길 역시 통합이 아닌 ‘지역 항만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 다’며 “지역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시민 들과 함께 여수광양항의 자율성과 독립성 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 혔다.
이에 앞서 광양시의회는 지난달 28일 4개 항만공사 통합은 단순한 공공기관 조 직 개편이 아니라 국가 물류체계의 항만 별 성장 전략, 지역발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통합추진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ikjin@gwangnam.co.kr

여수서 ‘제7회 섬의 날’ 연다
오늘 국가기념식에 3000여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섬의 가치와 중 요성을 알리기 위해 6일부터 9일까지 여 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남만 총선, 섬!’을 주제로 제7회 섬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
국가기념식은 6일 오후 7시 30분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전국 섬 주민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300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열린다.
기념식에는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 시 행정부시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서영학 여수시장, 주철현·조계원 국회의 원 등 주요 인사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섬 주민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행사는 여수 밤바다의 낭만적 이 미지를 바탕으로 국민에게는 휴식과 감성 을, 섬 주민에게는 삶의 자부심과 활력을 전하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진다.
행사 기간에는 섬의 자연과 문화, 음식, 정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 관을 운영한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주특별시의회 “집행부 조직개편 독주…실질적 협치를”

지방직 부시장 인사청문 과정서 설명·자료제공 부족 지적
반도체 산업 육성·군공항·국립의대 등 현안도 사후 통보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조직개편 과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 회 사이의 소통이 부족하다며 실질적 협 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조직개편 초안을 공식적으로 전달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부가 의회와 충 분히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진남 광주특별시의회 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민형배 시장이 최근 기자간 담회에서 조직개편안을 의회와 공유하며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담당 상임 위원회와 의장 비서실 등은 초안을 전달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개편은 광주특별시 행정의 뼈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며 “그럼에도 의회가 공식적인 설명조차 들 지 못한 상황에서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

고 있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고 덧붙였다.
특히 “조직개편은 통합특별시 행정체 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핵심 과제인 만큼 의회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선행 돼야 한다”며 “협치는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지방직 부시장 인사청문 준비 과정도 지적했다.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 치 조례’에 인사청문 대상 직위가 문화산 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공모 분야와 조례상 직무가 어 떻게 연결되는지 집행부가 명확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광주 군공항 이전, 국립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협의의 필요성

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의 회와 실질적인 협의보다 사후 설명을 하 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며 “협치가 실 종된 자리에는 결국 불신만 남게 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민 시장의 신중함은 공감하지만 이것이 소통이 미르는 이유가 돼서는 안된다”며 “충분한 정보 공유와 책임 있는 협의가 함 게할 때 비로소 신중함도, 속도도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운영에서 무엇보다 속도와 실행력을 강조하고 있 다”며 “하지만 속도는 집행부 혼자 내는 것이 아니며, 의회를 정책의 동반자가 아 닌 사후 통보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면 아 무리 빠르게 달려도 그것은 협치가 아니 라 독주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특별시가 성공하려면 정화 한 정보 공유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바탕 으로 한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